

지자체·정부·정치권 일제히 “연말 모임 가집시다”



전남일보 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 행안부, 17개 시·도회의 소비진작 민주당, 연말연시 모임 적극 권장

어수선한 정국 속에 모임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뜰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연말 장사마저 안되다 보니,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한 할인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함께 새해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개 자치구, 광주은행과 함께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백남인 서구 부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설 명절이 있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늘린

다.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광주상생카드 예상 발행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특별할인에 따른 지원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광주시가 60%, 5개 자치구가 4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시민이 선정한 올해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4위에 꼽힐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은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인당 선불·체크카드 통합 50만원 내에서 10% 특별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즉시 구매나 충전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또 기존에 추진했던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0.25%-0.85%) 전액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대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었고 연말특수도 사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며 “5개 구청장님들이 힘을 모아 준 덕분에 상생카드 할인율을 높일 수 있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1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비상시국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협약식’을 갖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게 됐고, 한시적 할인이지만 이를 통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민생에 활기가 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안정 독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 17개 광역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지역 내수 활성화를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먼저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한 축

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기성금과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 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 경기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정된 송년 모임 등을 계획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지역 경

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연말연시 모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10개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5개 지역위가 연말연시 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방문 등을 권유할 전망이다. **노병하·오지현·정성현 기자**

‘윤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일원화... 소환조사 코 앞

조사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더는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중복수사 조정 필요성 등을 이

유로 들어 이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는 출석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변호인단이 덜 꾸려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정도 하면서 시간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그 이상으로 출석을 거부하

면 절차상 체포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19일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의 간이 회견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